

1991

통일정책관련 주요연설문

통일원

통일정책관련 주요연설문 · 차례

노태우 대통령 주요연설

- 연두 기자회견(1991. 1. 8) 3
 - 서두연설
 - 기자과 일문일답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기 출범회의 개회사(1991. 7. 12) 21
- 제46주년 광복절 경축사(1991. 8. 15) 29
-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공동체를 향하여 37
 - 제46차 유엔총회 연설(1991. 9. 24)
-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1991. 11. 8) 50

최호중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주요연설

- '91년도 통일정책 추진방향과 남북대화 전망 5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 상임위원회 연설(1991. 2. 28)
- 제주 한소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71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특강(1991. 5. 2)
- 『통일대행진』 추진을 위한 대북성명(1991. 7. 15) 82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2주년 즈음 담화문(1991. 9. 11) .. 85
- 세계한민족 만남과 화합의 밤 및 제10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격려사(1991. 9. 16) 89
- 유엔 동시가입 이후의 남북한 관계 93
 - 국제학술원 주최 유엔가입 경축강연회 연설(1991. 9. 18)

- The Change of Soviet Military Policy and the Two Koreas :
Nuclear Issues and Arms Control 111
 - Keynote Address at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enter for American and Soviet Studies of Dankook University
(November 4, 1991)
- Korean Unification in a New World Order 124
 - Keynote Address at the 4th KIDA–CSIS Workshop
(November 7, 1991)

노태우대통령 주요연설

노태우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서두연설 1991. 1. 8

여러분 모두 199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국을 이기고 전진의 길로

지난 한 해 이쉬움도 많았지만, 1990년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자신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바로 1년전 우리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정초를 맞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정은 큰 흐름을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창조적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정계개편을 통해 정치 안정의 기틀이 이루어졌고 전환기적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국민의 합의는 사회 각 분야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제와 단합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켰고 9%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질서를 바꾸는 대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동유럽 여러나라,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고 제가 지난 달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냉전의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뛰어넘은 의미깊은 진전이었습니다.

안정 위의 발전... 소신으로 선도

우리는 안팎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을 안고 1991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헤치며 이만큼 자랑스러운 나라를 일구어온 국민의 저력에 불을 지피 민주주의와 변영, 통일을 향한 힘찬 전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그동안 펼쳐온 일들이 하나 하나 알찬 결실을 맺어 그 보람을 국민 모두가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 권위주의의 청산으로부터 주택 200만호 건설, 서해안 시대... 그리고 북방정책과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이르기까지 크고 많은 일을 약속했으며 지난 3년간 많은 일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과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민주화, 개방화, 국제화의 새로운 시대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새로운 사고와 분명한 소신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서둘러 해야 할 일은 서두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 일은 그 확실한 청사진과 그것을 이루어갈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주적 사고와 공명정대함을 앞장서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임기의 네번째 해를 맞습니다.

올해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또한 즐거운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비가 되는 해입니다.

남북한 관계도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기를 맞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질서, 안정의 바탕을 굳건히 세워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21세기가 이제 9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기안에 우리나라가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선진국... 7천만 겨레가 한 울타리 속에 사는 통일된 나라를 이를 확고한 기반을 닦을 것입니다.

민주발전의 시금석

30년만에 다시 시행하는 지방자치는 참다운 민주주의와 지방화시대를 여는 관건입니다.

올 봄 실시하는 지방의회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는 일은 지방자치는 물론 우리 민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5천여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이 선거를 성숙한 민주주의식으로 잘 치를 경우 내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총선거,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의 발걸음은 밝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가 무질서와 불법을 조장하고 지역감정을 격화하는 혼탁한 것이 된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나라의 앞날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선거가 돈을 쓰는 선거로 타락할 경우 애써 다져

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돈을 쓰는 행위나 사전선거운동,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신성한 민주선거의 규율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민주적 범죄로 규정하여 여야나 지위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참뜻은 주민의 참여와 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두가 금품과 선심을 스스로 거부함은 물론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감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정치를 빌미로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을 배제하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일꾼을 뽑아 주어야 합니다.

6.29선언으로 민주주의 길을 연지 4년째를 맞는 이제까지 정치권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겸허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정치는 갈등과 불안을 증폭하는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통합을 실현하는 참다운 민주정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집권여당부터 냉철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국민의 참된 여망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이라는 신뢰를 얻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올해는 지난 30년간 여섯 차례에 걸친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마무리짓는 해입니다.

내년부터 1996년까지 추진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완수되면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 고도산업선진국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망의 선진국 대열로 뛰어 오르는 마지막 한 계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진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의 활력을 충전하여 경제규모를 키워갈 뿐만 아니라 기술과 산업구조, 기업경영으로부터 국민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기조를 견지하면서 올해 7%의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1인당 국민소득 6,200달러, 교역량 1,500억달러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밖으로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유가의 불안, 세계경제의 침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통상마찰 등 어려움이 겹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또 내부적으로도 유가, 임금의 상승에 따른 물가의 불안요인을 안고 있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시원스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임금, 노사관계의 안정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물가와 임금이 또다시 급속히 오를 경우 그나마 되살아 나고 있는 우리 상품의 경쟁력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며, 우리 경제도 주저앉고 말것입니다.

지난 30년간 피땀어린 우리의 노력은 물론이고 머지 않아 선진국에 진입할 꿈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든 경제주체가 이 분명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모든 경제주체는 올해 페르시안만 사태의 악화로 인한 유가의 폭등과 같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 요금, 집값, 전·월세 등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물가상승이 한자리수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도 물가상승의 범위내에서 자제해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사회적 합의>로 우리 경제가 안정을 확고히 하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활성화

경제안정 못지않게 시급한 일은 제조업 특히 수출 산업이 활력을 회복하여 성장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산업현장에 우렁찬 기계소리와 근로자의 바쁜 일손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수출역군이 세계시장에서 밤낮없이 뛰는 활기찬 모습을 우리는 되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힘은 모든 경제부문에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특히 인력난의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한계점에 다달아 우리 산업 경쟁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도로, 항만, 공장용지 등 사회간접자본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의 올 예산은 2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2% 증액되었습니다

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잉여금과 채권발행을 통해 1조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고속도로와 국도 그리고 부산, 인천 항만의 확충에 투입할 것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건설과 또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93년까지 앞당겨 완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안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이 설치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구조를 왜곡해온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비생산적인 서비스산업의 팽창을 억제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비합리적인 규제는 풀고 각종 부조리도 없앨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견인차로 하여 건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잘 사는 농어촌도... 소외된 계층의 복지도...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본격적인 개방의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농업은 물론 모든 산업이 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산물의 개방이 없더라도 좁은 농토와 인력에 의존하는 영세한 영농만으로는 복지 농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농촌발전의 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의 구조조정에 과감한 투자를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만이 앞장선다고 해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로자, 농민, 기업인...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분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4대과제

정부는 모든 국민의 절실한 바람인 주택, 교통, 환경문제의 개선과 교육의 혁신에 올해도 집중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주택은 지난 해 75만채가 착공된 데 이어 올해 50만채가 새로 건설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약한 주택 200만채 건설의 모든 집이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새로 지어지는 집이 본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서 주택사정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 집값도 안정될 것입니다.

교통난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의 도심교통량을 분산할 판교-퇴계원간 수도권 고속도로를 92년까지, 또한 서울과 신도시를 잇는 수도권 전철을 93년까지 완공하고, 서울의 지하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부산의 지하철 연장과 주요 도시의 지하철 건설을 서두를 것입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는 임기중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할 중기 종합대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대기와 수질,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의 처리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환경지표>를 제시하고 산업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의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내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을 특별회계로 투자하여 교육환경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획일적인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대학 과열 진학풍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학입시제도와 고교교육의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건강한 사회

민주주의와 번영은 안정되고 질서있는 사회 속에서만 꽃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지난 3~4년간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얻은 교훈입니다.

지난해 <10.13 선언>을 기점으로 펼쳐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온 국민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질서와 새생활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안락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다함께 이루어 가는 생활규범으로... 90년대 국가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다스리는 일은 한치도 물러섬없이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사회의 규율을 어기고 퇴폐와 향락을 조장하는 풍조도 사회개혁적인 차원에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음주 난폭운전, 불법주차의 단속으로부터 심야영업, 퇴폐업소의 규제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 일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정부와 공직자는 앞장설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질서있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사회 곳곳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고 맑은 물결이 넘치도록 각계 국민 모두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

올해는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유럽을 바꾸어 놓은 변혁의 물결은 이제 동아시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기 이전부터 북방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의 변화를 앞서 내다보고 슬기롭게 대응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대결구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 땅에 전쟁의 불안을 가시게 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일본, 유럽 공동체 여러나라와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바탕위해서 소련과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이 달중 무역대표부의 상호 설치를 계기로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내외로부터 그들의 폐쇄노선을 바꿀 수 밖에 없는 한계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북한은 바뀔 것이며 남북관계에도 큰 전기가 올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분단이후 처음 남북총리회담이 세차례 열리고 제한된 범위나마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북간의 대화를 진전시켜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간에 진정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이제 통일의 외적 장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은 이미 성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저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통일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나라를 만드는 것... 남부럽지 않은 선진국을
만드는 것... 통일된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상이나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전과 기회를 함께 맞고 있습니다.

험난한 역정을 거치면서도 버린 적이 없는 겨레의 이 오랜 소망을
이루는 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제 다함께 나설 때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제가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힘찬 전진을 이룩합시다.

감사합니다.

남북관계 진척 기대

•기자 : 조선일보 이상철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남북한 총리들을 통해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간접대화를 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전망과 판단을 내리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연내 실현가능성과 대화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고맙습니다. 남북관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가지 대화,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장래에 대해 조심스러우나 희망을 모두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세차례의 총리회담을 위시해서 음악인, 체육인, 또 학자들의 접촉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런 많은 접촉과 교류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많은 대화와 접촉 그 자체를 우리는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하루속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제적인 변화에 호응을 해서 그들의 폐쇄노선, 그들의 고립에서 탈피를 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나오기를 진실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 이제 북한은 현재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져있다, 여기에 아주 큰 갈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이 다 변했습니다. 또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북한만이 저 낡은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사정을 직시하면서 인내로써 끈기있게 현실적인 접근을 앞으로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비록 지금 북한의 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했듯이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또 주변국기들이 전부 다 변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은 내부적으로 한계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현실적인 노선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 북한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했을 때는 이 남북관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나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대망의 남북통일도 금세기 안에 반드시 이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오래 전부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쌓이고 쌓인 오해와 불신관계는 정상이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을 때는 훨씬 더 쉽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북관계의 진척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제안했던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김주석도 심사숙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문제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이 있지요. 법률이 제정 되었고... 여기에 따라 절차도 다

마련된 것으로 여러분 알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누구나가 북한주민과 접촉을 할 수 있고 또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북쪽을 많이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부 다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우리 교수들, 또 학생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혹은 또 접촉·교류하려는 신청을 정부에서 206건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해서 북한에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에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허용하는데 북한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경우 206건 중에서 내가 보고 받기에 3건만 북한에서 받아들였고 나머지 203건은 북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북한에서 우리 정부창구를 통해 신청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 거부해 버리고, 자기들의 공작 목적상이라든가... 혹은 자기들의 통일 전선 전략에 필요한 인원만을 북한으로 초청을 한다든가... 또 대화와 접촉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국한해서 받아들인다든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남북한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인사들이 정부의 창구를 무시하고 법과 절차를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북한이 원하는 방법을 택해서 북으로 가겠다, 북한과 접촉을 하겠다 하는 것은 불법이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남북한 UN 동시기입 노력 계속

• 기자 : 연합통신 임경록 기자입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께서 동구

권의 여러나라와 수교를 하시고 그리고 소련을 방문하셔서 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방외교가 괄목할 진전을 이룩해서 국민들 모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북방정책은 중국이라는 중추역 하나만 남기고 있는데 금년에 중국관계개선을 각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북한 UN 동시가임을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UN가입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해주십시오.

•대통령 : 예, 고맙습니다. 우리와 중국간의 관계...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또 지리적으로 보나 빨리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상호의 번영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를 촉진시켜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결과 이달중에 서울과 북경에 상호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양국간의 교류, 교역을 더더욱 크게 확대해 줄 것입니다. 이미 양국은 연간 수만명의 사람이 오가고 있고 또 교역만 하더라도 연간 32억불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역대표부가 설치되는 것은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중간단계로 보아도 좋다고 봅니다.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도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이룩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봅니다. UN가입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는 UN가입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시한 대화중에서 바로 이 의제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남북한 대화를 통해 동시 가입을 설득시키려는 목표에서 작년에 우리는 단독 UN가입 신청을 보류한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동시가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계속 북한이 응할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작년 우리가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또 UN 회원국 대다수가 우리가 가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라도 먼저 가입을 하되 그렇다고해서 북한의 가입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북한의 순차적인 가입을 환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서로가 어깨를 나란히 해서 협력하는 이런 여러가지 노력을 우리가 함으로써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통일을 위해서 훨씬 더 빠른 길을 우리가 열어나갈 수 있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점 방향

• 기자 : KBS의 홍성규 기자입니다. 내일이면 가이후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과 걸려있는 재일동포간 법적지위 문제라든지 무역 불균형 또는 기술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일본과의 현안이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연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한·소 정상회담 그리고 일본과 북한과의 수교 움직임. 이런 것들로 해서 올해에는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재편과 관련해서 미국·일본 등 기존 우방국들과 또 소련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 그리고 이런 조화를 어떻게 이루면서 변화에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대통령 : 예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내일 일본의 가이후 총리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내가 일본을 방문해서 새로운 차원의 양국관계를 정립하는 뜻깊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작년에 이룩한 양국간의 새로

운 관계를 더욱 더 확실히 굳히는 이런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것이 이제 우리 동포들의 법적인 지위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작년에 제기를 해서 매듭을 짓는다는 합의를 이룩했습니다마는 이번 회담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매듭이 지어지리라고 기대를 해마지 않습니다. 또 무역 역조를 시정하는 경협문제도 우리가 소망하는 방향으로 일본의 협력을 얻는 문제라든가 또 그외에 문화교류를 위시한 선린우호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는 문제를 내일 회담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지금 북방외교와 관련 한·미관계, 한·일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세계의 격동에 이르는 변화, 즉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저 동구라파에서 이제는 바야흐로 동북아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루었던 한·소의 관계 정상화 이 자체가 벌써 동북아 질서를 개편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반도의 주변이 전후 최대의 변혁을 이룩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구라파, EC와의 외교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북방외교가 보태져가지고 소련, 중국, 또 동구의 여러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자주 외교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생각을 해 마지 않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외교의 중점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때 세가지를 내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안보·정치·경제 등의 모든 면에서 소위 국익이 무엇인가 하는 판단을 해서 이 국익을 최대한으로 신장하는 방향의 외교를 해야한다는 것.

또 둘째는 국제정세의 급변하고 있는 흐름에 능동적으로 우리의 외교역량을 가지고 활용하여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또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킨다 하는 데 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전 세계, 여러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우리가 기여를 하고 또 우리와 주변 여러나라들과도 조화를 이룩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소련과 이제 관계 정상화를 맺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험들이 이루어지고 또 통상이 이루어지고 과학기술 협정 등으로 해서 우호관계가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또한 이제 무역대표부를 서로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북방 여러나라들과의 외교의 관계정상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서로의 번영과 나아가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일들이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북방정책이 혹시 우리의 대미외교, 대일외교와 어떤 선택의 상관관계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소련사이에 냉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소련 할것 없이 이제는 같이 우리의 북방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역시 북방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외교적으로 우리 대미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또 일본이라든가 또 구라파와의 관계를 그 북방외교의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으로서 북방외교가 추진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 한·미관계, 또 한·일관계, 한·EC 관계 이것은 더욱 더 성숙된 이런 동반자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기 출범회의 개회사

1991. 7. 12

친애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기 출범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주민이 직접 뽑은 5천여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새로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야정당과 사회단체, 주요 직능단체와 국내외 각 지역을 망라한 지도적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민주평통」은 온 겨레의 통일외지를 실천하는 명실상부한 범 국민적 통일기구로서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평통」이 이처럼 믿음직한 모습으로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된 것은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민주평통」은 온 국민의 지지와 신뢰위에서 겨레의 통일역량을 집결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구심체가 될 것입니다.

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

지난 2~3년새 세계는 이 세기를 매듭짓는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우리 겨레와 국토의 분단을 가져온 냉전체제가 그 바탕으로부터 무너졌습니다.

소련과 동유럽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1당독재 체제는 잇달아 허물어졌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향한 인간의 열망은 동서세계를 갈라온 철의 장막을 걷어냈습니다.

이 큰 변혁속에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것처럼 빨리 올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로 달리 살아온 두 독일이 하나로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독일민족은 유혈도 좌우익의 투쟁도 없이 통일의 위업을 평화와 평온속에 이루었습니다.

세계를 바꾸고 있는 이 대변혁의 물결은 이제 우리가 사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 일본등 이 지역 관계국가들은 냉전의 오랜 교착상태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과 한반도에 냉전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질서를 앞장서 이끄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변화에 앞서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소련과 중국, 동유럽으로

가는 넓은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작년 나와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한반도에 냉전의 얼음을 깨는 지각변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1년새 세차레의 한소정상회담으로 소련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와 협력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한반도에 어떠한 무력도발도 반대하며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우리 겨레의 소망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련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촉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국제적 노력에 가세함으로써 그들의 결의를 실증했습니다.

나는 지난주 미국과 캐나다방문을 통해 외부적 요인이 우리의 통일에 장애가 되던 시대는 지났다는 확신을 새로이 했습니다.

부쉬 미국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통일이 이루어질때 가능하며 미국은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을 확고히 지지하며 이를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 여러분,

소련과 지난날의 북한 동맹국들이 우리의 통일정책을 현실적인 것으로 지지하고 미국과 온 국제사회가 북한이 폐쇄노선을 버리고 개방된 세계로 나올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이상 이 세계속에 단 하나의 폐쇄된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변할 것이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이 종래의 완강한 태도를 바꾸어 올 가을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변화의 시발일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통일을 이룰때까지 남북한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교류협력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합니다.

냉전체제 자체가 붕괴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여전히 상대방을 전복의 대상으로 보고 적대적 행동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은 단절과 대결의 비극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남북한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하루속히 청산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신뢰하고 화해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한의 동포가 자유로이 오가며 공존공영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면 우리 민족의 강한 결집력으로 7천만 겨레가 한나라를 이루는 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열릴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와 교류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홀로 살 수 없는 이 세계에서 그들의 발전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개방된 세계로 나오는 것은 민족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우리 겨레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자랑스런 위상에 서기위해서도 해야할 일입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 여러분,

한반도 문제는 이제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의 길을 찾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고위급회담과 여러 통로의 회담과 대화가 지체 없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남북동포간의 인도적문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물론 정치군사문제의 해결도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동포간에 분단의 고통을 덜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북한측과 논의하고 전진적인 조치를

취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남북한이 공존공영의 관계를 이루어 평화통일의 여건을 우리 스스로가 성숙시켜 나가기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루빨리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한겨레로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북한측이 주장해 온 것처럼 남북의 동포와 젊은이들이 참여하여 광복절 경축행사를 함께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올 8월15일을 기하여 그것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남북한 공동주관으로 판문점에서 남북한동포가 다함께 모여 공동 경축행사를 개최하고 통일문화축전을 갖는 것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의지를 스스로 확인함은 물론 이를 온 세계인의 가슴에 심어 줄 것입니다.

광복절의 뜻을 기리기 위해 남북의 젊은이들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통일대행진을 실시하고 남북의 각계 대표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통일대토론회를 갖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측이 이러한 일을 실현시키는데 우리와 뜻을 같이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남과 북이 40년이 넘는 오랜 단절속에 생활양식과 사고마저 달라지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에 비추어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남과 북의 학자와 전문가가 민족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하고 언어의 이질화현상을 해소해가는 일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족문화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 남과 북은 서로에게 절실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일로부터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

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모형제마저 오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없으며,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통일은 공허한 외침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은 무엇보다 나이트 이산가족부터라도 생전에 고향을 찾고 혈육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남북간의 인적교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촉진되어야 합니다.

나는 남과 북의 동포들이 서로를 올바르게 보고 이해하도록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부터 우선 상호교류하고 개방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서로 다른 송출방식의 문제는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안에 공동전환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 과학기술분야의 폭넓은 교류는 남북한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남북동포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일입니다.

셋째,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대결을 지양하여 한반도에 긴장의 시대를 종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오는 9월 유엔에 함께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한반도와 국제적 문제에 협조협력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고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이 있는 국가들도 필요한 협조와 공동의 노력으로 이

를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 여러분,

우리는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루이침에 남에 의한 분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과 비극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통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분단의 시대는 이 세기안에 막을 내릴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서로를 가르며 모든 장벽을 허물고 있는 이 세계에서... 자유와 번영을 이루고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이끌고 있는 우리의 역량이 통일의 여건을 성숙시키고 있는 이제 한반도만이 냉전으로 얼어붙은 분단된 땅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혈이나 엄청난 비극을 수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통일을 평화와 질서속에...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화합속에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창하고 이끌어가는 통일의 방향은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세계의 변혁속에 맞고있는 이 통일의 기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분단의 비극을 안은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었고 세계의 변화를 올바르게 보지 못했으며 그나마 내부적 분열로 우리가 뭉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통일의 대비태세를 서둘러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은 통일에 들 비용과 노력, 통일과정에서 맞게될 도전에 대비하고 통일한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입니다.

국민 각계각층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민주적 의사에 따라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평통」은 이 모든 일을 밀고 나갈 중추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평통 여러분이 7천만 겨레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어 민족의 통일 역량을 결집하는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땅에 분단과 불안의 어두운 시대가 가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믿음을 나눕니다.

우리는 통일을 향해, 민족의 밝은 미래를 향해 온 국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6주년 광복절 경축사

1991. 8. 15

친애하는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겨레와 나라의 밝은 장래에 대한 믿음을 다함께 나누며 광복 46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지금처럼 나라에 생동력이 넘치며 국민 모두가 자신감에 충만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꿈결에도 그리던 영광스런 나라를 이 세기안에 우리 세대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생존권까지 남에게 유린당한 어둠의 지난날은 역사의 장이 되었습니다.

남에 의해 나라를 분단당하고 동족상잔의 처절한 전쟁을 치렀던 수난의 시대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와 국권을 침탈당하고 식민통치의 핍박을 감수해야

했던 약소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자랑스런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힘이 즐기치게 뻗어나고 있습니다.

7천만 겨레가 한 나라속에 평화롭게 살 통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후,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 놓은 것도... 국제사회의 변두리에 머물게 해온 것도 이 세계의 냉전체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4년사이 세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기적 변혁을 앞장서 이끌어 지난 반세기 우리 앞을 가로막아온 냉전의 굳고 높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새 지난날 냉전체제의 다른 한쪽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국교를 열고 우호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동중부유럽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웃 중국과도 무역대표부를 교환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겨레 앞에 세계는 하나가 되었으며 온 지구촌이 우리 국민의 활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외부의 요인도 우리 민족의 앞날을 가로막거나 통일에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작년 12월 저와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발표한 모스크바선언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한국전쟁이후 남북관계의 가장 큰 전환일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까지의 완강한 태도를 바꾸어 유엔에 들어오는 것은

개방된 세계로 나오는 시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가 아니라 두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분명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이 먼저 공존공영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추구해 왔습니다.

저는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이땅에 전쟁의 위협과 대결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와 자주통일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북한은 이제 모두가 유엔헌장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실천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은 바깥 세계와 높은 담을 쌓은 폐쇄체제로는 스스로의 발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나서기 위해서도 먼저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남과 북은 유엔 회원국이 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신뢰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라의 분단은 남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통일은 우리 겨레 스스로의 의사와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의 모든 문제도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군사분야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북한과 제한없이 협의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땅에서 냉전을 청산하는 일은 무엇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동포가 서로 오가며 이해하고 믿음을 쌓아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다른 정치체제 아래 살더라도 한민족은 하나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남북한간에 통신과 통행, 통상의 길마저 단절된 상태를 그대로 두고 남북한 관계는 진전될 수 없습니다.

최근 남북한간에 물자교류가 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그것은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특정한 지역에 합작공장을 건설하거나 관광·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남북이 제3국에 공동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열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여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인류화합의 축제로 치르고 한국이 세계의 중

심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우리 모두의 피땀으로 일군 번영의 힘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7천만 겨레가 한 나라를 이룰 통일도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기안에 대망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6천달러로 신흥산업국가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단계로부터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길에는 거센 도전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급속한 성장과정속에 누적된 갈등과 불화의 요인...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자세가 보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앞선 나라 국민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절약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자의 행복한 삶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모두가 다시 일어서 번영을 더욱 키우는데 힘을 뭉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만이 민족성원 누구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나라를 이루는 길이며 통일을 성취하는 바탕이라는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우리는 안정과 질서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토양이라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위에 민주적 안정의 기반이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것을 통해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더 큰 발전의 힘을 이끌어 내야 하는 성숙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치도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 창조적인 정치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연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가 모든 분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굳건한 터전을 닦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 우리는 현실을 바로 보고 그 위에서 밝은 내일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겪어 온 격동과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파란만장의 현대사를 몸으로 부딪쳐 살아오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정당하게 평가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 우리 역사를 비뚤게 보고 왜곡하는 시각이 자리잡아 왔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계급혁명론에 바탕하여 나라의 정체성 자체까지도 부정하는 주장이 일부 젊은 세대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과거를 송두리채 부정하려 해 온 나머지 우리 현대사의 모든 것을 단절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풍조도 있습니다.

오늘의 세기적 변혁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독재는 엄청난 비극과 유혈을 남긴채 실패한 역사로 끝났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이 나라의 정통성은 이제 세계와 역사속에 더욱 확고하게 정립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와 함께 정부의 정통성도 바로 섰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모두 잘못된 것이고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면 세계가 놀라와 하는 급속한 발전도...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오늘의 나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현대사를 올바르게 조명하여 잘못된 우리의 참된 교훈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잘한 일... 자랑스런 역사는 주옥처럼 엮어 우리들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은 나라잃은 그 캄캄한 시대에도 스스로 횃불이 되어 민족사의 정통성을 밝혔습니다.

그 숭고한 뜻이 깃든 이 독립기념관에서 광복 46년을 맞으며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세우는 일에 다 함께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동포 여러분,

이 세기가 다하기전에 우리는 겨레의 소망을 이루어 새로운 세기를 영광속에 맞을 것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위에서 불사조처럼 일어나 자유의 활력이 넘치는 오늘의 나라를 이룬 우리 국민의 저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겨레의 뛰어난 슬기와 역량을 뭉쳐 번영이 넘치는 나라... 세계속에 당당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광복 반세기를 내다보는 오늘까지 나라의 분단이 가시지 않고 민

죽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단의 비극을 안겨준 그 세계질서자체가 와해되고 한반도는 통일을 향한 큰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일로 이끌 것이며, 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7천만 우리 겨레가 한 울타리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날,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겨레 모두의 역사적 소명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라와 겨레의 밝은 앞날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46주년 광복절을 온 겨레와 함께 경축하며 오늘의 우리를 이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게 한 애국선열과 광복지사 여러분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공동체를 향하여

제46차 유엔총회연설 1991. 9. 24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종과 종교,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 서울올림픽의 신선한 감명을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세계는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올림픽이 구현한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내가 이 연단에 회원국의 대통령으로서 다시 서게 된 사실도 역사의 이 새로운 물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UN에 들어오기까지는 우리가 처음 가입을 신청했던 때로부터 42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민이 인내로 기다려 온 그 오랜 세월을 상기한다면, 여러분은 오늘을 맞는 우리 국민의 감회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 존엄한 세계기구에 가입하도록 성원하고 지지해 준 모든 분들과 우리의 자리가 이 곳에 없었을 때 우리를 대변해 준 모든 나라, 모든 분들께 4,300만 한국민이 보내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UN가입을 막아 온 것은 냉전체제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 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그다니스크의 자유노조 근로자들, 부다페스트의 과감한 정부, 프라하의 비츨라프광장에서 자유를 외친 사람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지난날 동독의 국민들... 이들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세계에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들이 허문 것은 이들 스스로를 구속해 온 장벽뿐만 아니라 인류를 진영과 진영으로 갈라 적대, 대결의 관계에 세워 온 우리 모두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바탕은 누가 무어라 해도 소련의 개혁일 것입니다.

자유와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며, 전 시대에 일찌기 없던 변영을 이룬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의 성취가 이들을 고무하였습니다.

나는 화해로운 하나의 세계를 소망해 온 모든 사람들과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지난 날의 불가능을 현실로 이룬 이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나는 귀하가 제46차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총회가 알찬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이번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우리의 형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나는 북녘의 우리 형제들과 평화와 통일의 길을 함께 걷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들의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모적인 대결을 지속하는 것은 분단의 비극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함께 UN에 가입하는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믿음으로 이를 추구해 왔습니다.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은 분단 이후 남북한 관계의 가장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이제 남북한은 모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UN헌장을 준수하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나는 남북한의 대표가 이 평화의 전당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대하며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한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나, 우리는 하나의 겨레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다른 의석으로 UN에 가입한 것은 가슴아픈 일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단계입니다.

우리 UN대표단의 자리가 옵서버석에서 회원석으로 불과 수십미터 옮겨 오는 데 40년 넘어 걸렸고 동·서독의 두 의석이 하나로 합쳐지는 데는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두 의석이 하나로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은 이 평화의 전당에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길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분단의 비극을 가져다 준 냉전체제 자체가 와해된 이 세계에서 민족자결에 바탕하여 자주적으로,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한반도에 통일을 성취함으로써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온 인류의 전진에 동참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UN과 회원국 모두가 성원하고 지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세계는 세기적 변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억누르는 압제체제는 세계 곳곳에서 해체되고 경직된 이념으로 인한 재난은 끝나고 있습니다.

냉전은 그 의미를 잃고 나라와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변혁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혁명의 유희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 정신에 의해 역사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변혁은 이제 위대한 출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온 인류에게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안겨 주는 세계의 이 변화가 평화를 구가할 새로운 질서로 형성되기까지는 멀고 험난한 길을 가야 합니다.

지난달 소련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는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충격과 우려속에 그 사흘을 보냈습니다.

탱크의 포구에 장미꽃을 꽂은 모스크바 시민의 승리는 평화를 소

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평화는 불가분의 것임을 절감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개혁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소련과 중동부유럽 여러 나라는 수십년을 지켜온 정치, 경제, 사회의 틀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숭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희생은 그 혜택이 미치는 만큼 나누어져야 합니다.

냉전시대 세계는 군비경쟁과 안전보장에 엄청난 자원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세계의 이 큰 변화로 인한 평화의 혜택은 세계 모든 나라, 인류 모두가 오랜 기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변명을 누리는 모든 국가가 지난날 통제된 체제와 중앙계획 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전후 냉전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우리 만큼 평화로운 세계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 전쟁의 잣더미 위에서 일어서 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온 한국은 경제부흥과 민주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이들 나라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풍요를 누리는 나라도... 선진국도 아니지만 소련과 중동부유럽국가의 개혁을 충심으로 성원하고 우리들의 능력안에서 최대한의 협력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

나는 제43차 UN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

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세기의 세계가 빚어온 모든 고난이 이 땅을 짓밟았고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지난 3년간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변혁이 이 세계의 지축을 흔들기 전부터 냉전의 벽을 스스로 뛰어 넘어, 소련과 중동부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웃 중국과도 교류협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서로 오가는 길마저 단절된 채 대결해 온 이들 나라와의 새로운 우호협력관계 속에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물결이 한반도에도 미쳐오고 있음을 보았으며 화해의 위대함을 체험했습니다.

한국민은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분단된 땅에도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UN가입으로 한반도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남북한은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지금 이 시각에도 170만명의 밀집된 군사력이 250킬로미터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의 상태에서 우리는 근40년간 긴장된 삶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서로에 대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기동훈련과 부대이동을 사전에 통보하며,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상주감시단을 상호파견하는 등 군사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핵에너지는 파괴를 위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에 조건없이 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 간에 신뢰구축 노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 전력의 감축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의 협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셋째, 남북한은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의 길을 열어 단절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1천만 이산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헤어진 부모형제의 생사나 거처조차 모르고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화 주고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나 관계개선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은 이 개방된 세계에서 모든 나라간에 통용되는 자유로운 통행, 통신과 통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남북한은 정치, 군사, 교류협력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실질적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UN동시가입으로 새로와진 상황 속에서 내달 열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남북한 간에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나 경제, 문화, 체육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된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서로가 돕는 공영의 관계를 이루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교역은 물론 관광,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과 합작공장의 건설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한겨레는 1,300년간을 하나의 나라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 왔습니다.

남북한 간에 각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촉진되면 민족의 강한 결집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급속히 성숙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한반도만이 냉전으로 분단된 유일한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를 가르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시간문제일 뿐 역사의 순리입니다.

통일한국은 민족 성원 모두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의장,

우리는 한반도뿐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분쟁지역에 하루 속히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중동과 캄보디아, 앙골라, 서부 사하라와 중미 등 세계 곳

곳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UN이 이를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 하며 특히 페레스 데 꾸에야르 사무총장의 헌신에 경의를 포함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그 요인을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무력사용에 대해서는 집단안전보장조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걸프사태에서 UN이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날 대결해온 나라들이 UN을 중심으로 연합한 것은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신념을 굳건히 해 주었습니다.

UN의 첫 집단안보조치를 통해 자유와 생존을 지킬 수 있었던 대한민국은 UN이 국제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나라가 서로를 위협하지 않으며 인류가 평화속에 살고 있다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 온 세계를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가공할 무력에 안전을 의존하는 한, 인류는 평화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계에 공포의 균형을 정당화해 온 대결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미·소 두나라가 지난 7월 전략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한데 대해 찬사를 보내며, 그것이 전세계적인 군축을 가속화하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화학무기의 전면폐기를 지지하며, 국제적인 조약이 체결될 경우 조기에 이에 가입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동북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이 긴장완화와 군비통제에 대해 새로운 사고와 접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의장,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다툼의 근원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단합되고 인종차별없는 민주적 사회가 출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인류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고 있듯이 피부색과 민족, 종교와 출신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의장,

남북위원회 보고서는 “기아가 지배하는 곳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날 가난한 나라들이 겪고 있는 궁핍과 굶주림, 저개발과 외채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이해와 동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빈국의 단계에서 불과 한 세대의 기간에 역동적인 신흥산업국가를 이룩함으로써 가난한 개도국도 노력하면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1인당 GNP 100달러 미만의 가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교역량 세계 13위, GNP 세계 15위의 나라로 변모하였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발전은 시장경제와 개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부지런한 국민과 창의에 넘친 기업은 세계의 넓은 시장을 무대로 발전을 이루고 또 그것을 가속화해 나갔습니다.

UN과 세계의 많은 나라가 우리를 돕고 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에 위치한 중간국가로서 남북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세계로부터 입은 혜택에 보답할 것입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나눈 물론 자본, 시장, 정보의 교류와 협력을 가속화하는 교량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개도국의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선진국의 원조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남북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진국은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여 국가간 수평분업을 촉진하고 기술과 정보의 독점을 지양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세계시장은 개방되고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보호주의와 배타적인 지역경제의 불력화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UN을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환경·테러·마약문제 등 이 세계가 함께 맞고 있는 도전에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의장,

한 세기가 저물고 새로운 세기가 다가서고 있습니다.

20세기는 그 이전 수천년의 역사가 이룬 것보다도 더 크고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기는 전쟁과 대립, 모순과 비합리로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준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이제 인류는 이성과 평화에 바탕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유와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물결로 이 세계에 넘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사이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 특히 교통·정보·통신의 혁명은 이 세계를 인류가 한 이웃으로 함께 번영을 추구하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류에게는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너 온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파란많은 세계를 <평화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꿈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나라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개방하고 교류협력의 길을 넓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UN은 현장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세계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으로 인류 공동의 이 염원을 실현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세계의 이해와 도움만을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의 복리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기구에 대한 우리들의 다짐을 새로이 하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손에 손잡고 UN이 가는 길로 전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 진정 자유로운 세계, 그

무엇보다 평화로운 세계...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으로 여길 내일의
세계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1991. 11. 8

국민여러분,

나는 오늘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을 밝히려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반세기간의 암울했던 냉전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던 과감한 조치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적대세력들이 손을 잡고 인류공동의 미래를 위해 우호와 협력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의 폐기와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할 무차별살상력을 가진 화학무기의 완전폐기를 위한 협상도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넘치고 있는 세계를 보며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도 대결의 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계에서 유독 한반도에서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배치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폐기와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가입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거부한 채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학생물무기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반도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 후 근 40년간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제까지의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가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큰 우려를 갖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나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처에 응한다면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적극적 제의에 호응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비현실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며 국제적인 의무이행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평화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화학생물무기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무기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여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우리는 핵과 화학생물무기를 갖지 않는 이와같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국제사찰을 피하며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북한도 나의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이와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군사안보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제반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협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핵개발 기도를 하루빨리 포기하여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되기를 7천만 동포와 더불어 충심으로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정책을 선언하기에 앞서 정부는 이 정책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의 안보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 위에서 이와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북한이 이 세계의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와 함께 민족적 비극의 소지를 없애고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최호중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주요연설**

'91년도 통일정책추진방향과 남북대화전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심임위원회 연설 1991. 2. 28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미년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통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은 국권상실과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의 민족적 고난을 극복하고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세계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이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영광의 시대로 맞이하여야 한다는 결의에 차 있습니다.

분단 45년째였던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질서가 바뀌는 대변혁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전방위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는 가운데, 마침내 20세기에 들어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벽으로 인식되어 왔던 소련과도 국교를 수

립하고 양국의 정상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냉전종식에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남북의 총리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세차례나 진행하여 통일문제는 책임있는 남북의 당국자간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관철하였고, 남북축구대회와 합동음악회가 상대방 지역을 교대로 오가며 남북주민들의 성원속에 진행되었으며, 2천만 달러의 물자가 거래되고 쌀 1만 가마가 북한에 제공되는 등, 남북교류의 길이 넓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적 합의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가 평화통일을 위한 외적여건의 성숙과 우리의 국민적 여망에 비추어 볼 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하겠지만 45년의 단절과 대결의 역사적 과정에서 볼때는 비록 조그만 성과일지라도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아니할 수 없겠으며,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일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내외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걸프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정세가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기는 하나, '80년대 중반이후 계속되어온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의 흐름속에서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흐름이 과거사의 반성에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인간존엄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잡아가는데 발맞추어 우리는 주변국가와의 접촉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소련은 정상회담과 실질 경제협력을 통하여 보다 새로운 차원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차츰 알찬 열매를 맺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도 일본과의 수교협상, 미국과의 접촉등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움직임이 한반도를 갈라놓고 있는 이념의 벽을 조금씩이나마 허물어 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외교적 고립 등 중대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대한 의구심과 피해의식으로 인하여 폐쇄체제를 강화하면서, 남북간의 상호개방과 교류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우리 국민이 북한을 합법적으로 다녀온 경우는 우리정부가 승인해 준 206건의 방북 또는 접촉신청중에서 북한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3건에 불과하였고, 북한측은 우리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1천만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상호방문을 실현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무한정 지연시키고 있으며, 60세이상의 노령자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고향방문을 추진하자는 제의까지도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만 달러 상당의 물품이 교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북측에 쌀을 제공한 사실이 공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겠다고 하는 웃지 못할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반면,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해서도 내외의 많은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당국간 대화를 도외시 한 채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등 우리 내부의 혼란을 조성해 보려는 상투적인 대남정세에 오히려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열려 있습니다. 동구권과 비동맹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개방 체제로 정책을 전환하고 모든 국가들이 개방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아무리 폐쇄 체제를 강화하고 대남 전복전략을 수행하려 해도 이는 실현될 수 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식은 북한의 비현실적인 환상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지도층도 세계정세의 변화를 모를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그들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애써 외면하고 “우리식 대로 살자”라는 폐쇄노선을 고집하고 있지만,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해오고 최근 대일접촉을 적극 추진하는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 나름대로 정책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전환 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달 20일 일본을 방문한 북한의 노동당 대표단이 이제까지 그들의 기본정책으로 삼아왔던 “하나의 조선”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한 시사를 던져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외정세속에서 금년도를 비롯하여 앞으로 통일정책 추진

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된 단일국가로 되어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하며,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 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나리아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통일을 이루어가는 원칙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우리의 역량과 세계정세의 변화를 평가해 볼 때, 통일은 논의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천의 단계에 들어섰으며, 꿈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고, 통일비용의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통일이 실천의 단계에 들어섰으며, 현실의 문제로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정책을 현실적으로 실천해 가는 단계에 들어선 이때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완강한 폐쇄노선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적화통일의 환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통일정책 수행의 첫번째 중점과제라는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촉구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통일문제가 실천의 단계에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구태여 이러한 문제를 거론할 필요없이 미사여구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쳐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오늘날, 이를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면 이를 당당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통일정책 수행의 중점과제로서 북한주민의 인권과 북한사회의 개방이라는 데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명분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의 “우리 식대로 살자”는 그런식의 폐쇄노선은 결코 북한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20세기 말에 들어와 국제사회에서 가장 활력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유독 북한만이 그 발전의 대열에서 낙오되어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소요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낙후성의 원인은 바로 북한의 이러한 폐쇄정책에 기인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폐쇄정책으로 인해 내부적 침체에 빠져있는 가운데 전근대적인 일인독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한사회의 전복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통일노력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정치적 변혁속에 우리의 기존관념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술의 진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집단적 우민화를 추진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침해하는

것은 민족의 통합적 발전에 크나큰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이자 통일민족국가의 비전이 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자유·복지를 북한사회에 대하여 요구하면서 이를 가능케 하는 북한사회의 개방을 당당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촉구하며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남북대화를 통하여 북한사회의 개방과 인권보장을 북한에 설득하고 촉구하는 동시에 대내외 여론을 조성해 나가며 우리의 북방정책의 성과와 우방국들의 대북 접촉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폐쇄노선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 지도록 돕고 이끌어 나가 하루빨리 통일의 대도가 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통일정책 추진의 역점시책의 두번째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공존공영하는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실천적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2월 12일 남북체육회담이 타결되어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차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데 합의하는등 남북간 체육교류와 협력의 길이 연초부터 열린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1990년 8월 1일 제정·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남북간의 제반접촉과 교류협력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현재 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여러분야의 인사들이 차별없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 북한방문을 이루려는 노력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에 체육분야의 교류를 비롯하여 문화·학술·예술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대학생들의 교류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간에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과제는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가족상봉이기 때문에 인도적 교류의 실현을 위한 제 11차 적십자회담의 개최와 제 2차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측이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거부하고 나올 경우 60세 이상 이산가족 고향방문 촉구운동과 이산가족 생사확인 사업을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 이산가족들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이후에 제 3국을 통하여 북한의 가족과 서신왕래등 접촉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남북간의 접촉과 교류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남북이 다같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경직된 태도로 인하여 부분적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장애로 작용하여 왔던 손실위험을 남북협력기금으로 경감시켜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한소, 한중경제협력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남북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협력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동시에 북한 동포들의 생활

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향후 통일과정에서 대두될 통일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당국간 합의하에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통행·통신·통상등 이른바 3통 합의서 체결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위급회담이 잘 진행되면 남북간 3통 합의서가 체결되어 남북교류협력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정책 추진의 세번째 역점시책은 남북대화에서 의미있는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대상은 북한입니다. 따라서 남북대화는 통일정책추진 그 자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추진에 임하는 입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이제까지 계속하여온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는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남북간의 제반문제의 협의·해결은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해 나옴으로써 남북간 제반문제는 당국간 대화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

현재 남과 북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현안문

제 타결의 우선순위에 있어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틀을 우선 채택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불가침협정을 우선 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일성이 금년 신년사에서 “평화문제, 군사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려는데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남북고위급회담이 조기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무엇보다도 먼저 채택함으로써,

첫째, 쌍방이 남과 북에 두개의 정치실체가 존재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함을 내외에 선언하고,

둘째, 쌍방이 45년간의 대결관계를 제도적으로 청산하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적대적 언동을 중지하여야 하며,

셋째, 쌍방은 이러한 기반위에서 군비통제와 불가침을 실질화하고 경제·사회적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감으로써 평화롭고 통일지향적 상호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곧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북한의 적화통일노선과 대남전북전략의 실질적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고집함으로써 통일을 지연시키고 민족간 대결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간의 삶과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과학기술문명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20세기 말에 와서도 19세기적 관념에 사로잡혀 민족발전을 스스로 가로막는 시대착오의 사고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입장과 관련하여 한가지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일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는 남북간의 불가침협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불가침협정을 맺을 바에는 지켜질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불가침협정이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불가침선언이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완전한 장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2차대전으로 독·소, 일·소 불가침조약이 휴지조각으로 되어 버렸던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무기대결의 근원은 상호불신과 적대감이며, 이러한 불신은 북한이 “하나의 조선”을 내세워 남북사회의 전복전략을 계속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해 있고 막강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그대로 둔채 아무 보장장치없이 불가침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확보해야 할 채무를 지고있는 정부로서는 국가보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신중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간에는 서로 상대방을 믿는 바탕위에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무조건 군대부터 감축하면 신뢰가 구축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을 꾸준히 설득해 나갈 것이며, 그러므로써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벽두부터 북한측의 부정적 대화자세가 다시한번 우리를 실망시켜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2월 18일 평양방송을 통해 2월 25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던 제 4차 고위급회담을 예정대로 열 수 없게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은 그 이유로서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공동군사연습과 걸프전쟁과 관련한 경계태세를 내세웠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간에 합의된 회담날짜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왔지만, 한반도에 그 어느때 보다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의 돌연한 대화중단 조치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팀스피리트 훈련은 잘 알려진 바와같이 공개적이고 연례적 방어훈련으로서 남북대화의 진행과 무관합니다.

그 실례로 팀스피리트 훈련기간중인 지난 2월 12일에도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북한은 우리측이 『비상전시체제』를 선포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우리가 『비상전시체제』를 선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고, 북한의 억지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북한이 내세운 이유는 결코 회담중단의 구실로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회담을 중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 등 극심한 경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의 집권층이 정치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또 우리에게 대해서는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와 미군철수등에 대한 사회여론을 선동하고 우리의 정국추이를 겨냥하여 내부분열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처럼 북한측은 아직도 우리체제에 대한 교란·전복전략의 차원에서 대화를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북한측이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꾸준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재언할 필요도 없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책임자들간의 만남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간의 정상회담도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풀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스크바와 북경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는 오늘날 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리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위급회담이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 자연스럽게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 지도록 힘쓸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해 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었던 냉전질서는 벌써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민족만 구시대의 관념에 묶여 분단국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시대정신의 큰 흐름을 거역하며 우리 자신을 국제사회의 미아로 남겨두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금세기 안에는 통일된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통일정책을 추

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서 더욱 튼튼하게 정치·경제·사회의 안정과 결속을 다져 통일국가를 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바람직한 통일국가건설을 위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모두가 참여하고 성원하여 통일국가를 향한 대도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대도를 매진하는 민족적 대열의 가장 핵심적이고 지도적 위치에서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한소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특강 1991. 5. 2

우리나라 여성계를 이끌어 가시는 김경오 회장님, 그리고 여성지도자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기 힘든데 이렇게 자리를 꼭 메워주셔서 저로서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외무부 있을 때 부부동반해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내조의 공이 매우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만 이젠 여성들이 내조에 그치지 않고 밖에 나오셔서 남성이 하지 못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활약을 하셔야 할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가지 독자적인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발전, 안정 그리고 국제적인 협조증진 면에서 커다란 공을 세우고 계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은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저는 56년에 외무부에 들어가서 35년간 외무부에서 근무했습니다. 통일원으로 자리를 옮긴 지는 약 4개월이 됐습니다. 통일원으로 가기 전에는 통일이란 것이 민족적 염원이고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까운 시일에 달성해야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통일원에 가고보니 통일이란 것이 우리가 염원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눈앞에 바로 다가온 일도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면서 환상에 젖거나 일방적인 욕망만을 갖지 않고 현실적으로 한발짝 한발짝 다가서야 이루어진다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최근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보고 매우 부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 못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독일과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많이 움츠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신문지상을 통해 아시겠지만 북한대표가 먹고 먹히는 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독일과 같이 동독이 서독에 흡수돼 버리는, 북한 말을 빌리면 서독이 동독을 먹어 버리는, 이런 식의 통일이 한반도에 일어난다면 자기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먹고 먹히는 통일은 안된다 하면서 오히려 고립정책, 폐쇄정책 쪽으로 가는 부정적인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부럽게 봅시다라는 통일후의 독일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콜수상이 동독을 방문했을 때 영웅적인 대접을 받곤 했습니다만 통일이 된 후엔 모든 문제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땅에 떨어져 동독을 갔을때 토마

토나 계란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통일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통일후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하는 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인 한소수교 원칙 합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한소 정상회담 의의와 그것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간 외무부장관을 지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는 그야말로 한소 관계를 증진하는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6월 5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역사적인 한소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국민은 물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일생에 처음 만나는 사이임에도 오랜 친구같이 서로 가슴을 열어놓고 충분한 협의를 가져 그때 이미 한소수교의 원칙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양이 많이 쌓이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사과도 익기 전에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함으로써 한소수교원칙에는 합의하지만 이것을 급속히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이미 양국간에는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사처도 교환이 돼 있고 많은 기반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다. 내가 참을성 있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익었다고 할 때는 그 과일은 틀림없이 익은 거니까 그 사과를 먹으면 된다고 답변을 해 두분이 화기에애한 첫번째 만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9월 30일 제가 UN총회에 참석했을 때 세바르드나제 당시 소련의상하고 UN본부 회의실에서 만나 수교를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소련은 한소 수교에 합의하지만 그

발표날자는 '91년 1월 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한소수교가 바람직한 것이라면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으며 특히 그날은 세계아동문제에 대한 세계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수교를 한다면 후세에 대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냐고 설득해 9월 30일자로 수교가 됐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해 안에 우리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에서 소련과 교섭한 결과 작년 12월 13~16일까지 대통령내외분의 모스크바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스크바 방문은 양국간의 장래를 제시해주는 기본적인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은 양국관계 증진이 비단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 아시아문제, 태평양문제 해결에 큰 보탬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여러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그 선언의 기본골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성과위에 제 3차 정상회담이 제주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주 한소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제주회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는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했는데 왜 소련은 우리를 공식 방문하지 않고 제주에 들렀느냐는 것입니다. 시간도 당초에 정해서 하지 않고 저쪽에서 하자는대로 밀려서 밤중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일방적인 무례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회담이 됐다는 것입니다. 협정도 군사적인 협정을 해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나 일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이란 것은 꼭 수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응졸하게 어떤 공식적인 것만을 고집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치 좋고 분위기가 자유로운 곳에서 회담의 성과가 좋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외국의 경우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몰타 회담 같은 경우도 소련과 미국과는 아무 관계 없는 지중해 한 섬에서 양국 정상 이 만난 적이 있고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카리브해에 있는 마티니크라는 섬에서 부시대통령과 만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섬에서 만난다는 건 경치가 좋은 곳에서 만난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막상 이번에 제주에서 만나고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고르바초프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몇 시간 전까지도 일정을 정해주지 않아서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우리 대통령 회담 시간이 한 두 시간 늦어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하면서 자기가 기분이 나면 얘기를 계속해서 행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누우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약속 시간이 늦어졌다고 그럴려면 오지 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양식에 맡겨야지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에 다소 거슬리더라도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소정상회담은 원만하게 치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소정상회담의 의의

그러면 이번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고 그것이 어떤 의의를 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의 만남이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를 더욱 넓

히고 깊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6월 첫번째 만남부터 10개월내에 한소정상이 3번째 만났다는 것이 큰 의의로 볼 수 있고, 소련 대통령이 북한은 방문하지 않았는데 수교한 지 얼마 안된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했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아시아 동북의 조그만 나라, 그것도 분단된 약소국의 위치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성장했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소수교와 관련하여 30억불이라는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30억불의 경제협력관계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나 국교수립이나 소련에서의 2차 정상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교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동양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아 이러한 문제는 양국의 경제를 다루는 책임자들이 따로 만나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모스크바 방문후 금년초 소련 대표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30억불 경제협력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0억불 경제협력이 일방적인 원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경제협력이기 때문에 소련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이것을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응분한 댓가를 받는, 우리로서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협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억불 가운데 15억불은 우리나라 물자를 차관형식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생산을 해야 하는 일용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몇년후에는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외에 현금차관, 투자진출 등도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돌려받든지, 소련 형편이 좋아지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련은 통제경제로 있다가 자유경제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혼란스러워 여러가지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에 있지만 과거 소련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예가 없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몇년만 지나면 소련의 풍부한 천연자원이나 여력으로 보아 우리가 되돌려 받는다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은 그동안 북한과 계속 우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일방적으로 북한측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측으로부터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우리의 입장을 설명들어서 과연 어느쪽 주장이 옳은가를 객관적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책임있는 당사자간의 회담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고위급회담을 재개하는데 소련측으로서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UN가입문제입니다. UN가입문제에 있어서 소련측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UN가입과 관련하여 항간에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회의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북측이 그토록 반대하는데 왜 UN에 가입하려 하느냐, 이것은 남북관계에 해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몇십년을 기다려왔는데 왜 서둘러 이 시기에 UN에 가입하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입은 좋지만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반대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반대이유가 정당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국익에 해가 되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끝까지 반대하면 이를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북한이 UN가입 반대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므로 통일이 될 때 까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예멘의 예를 보더라도 UN에 따로 가입해 있던 나라는 통일이 되고 오히려 한반도는 통일이 되지않고 있는 사실을 볼때 이 주장은 허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제 서두르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가 북한 입장 때문에 UN가입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가입을 하려면 UN안전보장이사회 5개상임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입할 수 없는데 거부하는 나라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가입하자고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 우방국 외에 소련은 이제 UN가입을 지지하고 나머지 중국과도 직간접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국제적인 분위기도 우리의 UN가입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의 UN가입을 반대하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이 쉽니다. 그러므로 남은 몇달동안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중국도 찬성은 않더라도 기권이나 결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 시기를 택해 UN가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외무부 장관을 2년하면서 2번 UN총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참석이 말이 참석이지 구경하러 가는데 불과합니다. 읊저버 자격으로 회의장 구석자리에 앉아 남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면 기뻐하고 우리를 반대하면 서글프게 생각하는 이러한 참석이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참석하는 많은 나라의 외상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호소하는 그런 참석

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12번째 무역교역국이고 4,300만의 국민을 가진 당당한 나라로서 UN헌장에 규정된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입장임에도 우리가 회원국이 못되고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UN가입을 금년내에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 90년대 중반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국제적인 우려 속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안정협정체결, 이를테면 세계 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련측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핵무기 확산을 막겠다는 핵비확산조약이 있어 우리나라는 여기에 가입해 있고 북한도 '85년도에 가입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18개월내에 핵안전협정을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을 해서 핵사찰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북한은 이를 시행치 않고 비밀리에 핵무기 생산시설 건설을 서두르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남쪽의 핵시설이 철거되어야 하느니 한반도에 비핵지대가 선포되어야 하느니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안전협정 체결은 다른 아무런 조건없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므로 이것을 체결해야 한다는데 소련이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중국마저도 북한을 비판하면서 마땅히 핵사찰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한이 난처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소련이 과거 구라파에서의 역할에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이제는 눈을 이쪽으로 돌려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함에 있어 우리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

하다고 느끼므로 이제는 우리가 소련을 도울 정도로 국가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련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소관계 증진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한소관계 증진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웠던 소련이 갑작스럽게 한국과 가까와지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가지로 기분도 상하고 감정적으로도 날카로워져 일시적으로 한소관계 증진에 반발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볼 때 세계가 변화해 감으로 북한도 개혁과 개방을 통해 변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구권뿐만 아니라 제 3세계 비동맹국가들도 우리와 수교를 하고 알제리아 같은 북한과 가까운 나라도 우리와 수교를 해 나가는 것을 볼 때 북한도 계속 우리 식대로 살아간다는 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볼 때는 인권이 억압된 가운데 경제가 파탄의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기식대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못하여 독일식이나 루마니아식대로 되면 체면이 말이 아니므로 김일성 생존시까지의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예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로 이것을 유지하면서 연방정부를 그 위에 세우자는 주장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남한은 반정부, 반체제 단체 등에서 혼란이 엿보이므로 이것을 조금 부추키면 교란작전으로 남쪽을 전복시켜 적화통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측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통해 자주, 평화의 원칙에 따라 자유

롭게 번영하는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이산가족문제, 체육, 문화교류, 물자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 통일로 나아가자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환상을 키워주는 일이 없도록 안정과 민주화, 경제발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여성 지도자께서 앞장서서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대행진」추진을 위한 대북성명

1991. 7. 15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겨레가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또한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으로 이어진 어두운 역사의 출발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는 8월 15일은 이 광복의 날로부터 4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통일조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고 화해와 개방의 새로운 조류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북간에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이루어 통일을 앞당기는 새로운 돌파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7천만 온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이 염원을 받들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면서, 북한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금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통일대행진」을 오는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남북공동으로 성대하게 거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 8월 15일 판문점에서 「광복절을 경축하는 기념행사」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을 종단하는 「국토종단대행진」을 갖는 가운데
 - 평양과 서울에서 두차례의 「통일문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 백두산과 한라산 정상에서 「통일기원제」를 가지며
 - 8월 31일 판문점으로 돌아와 향토음식잔치와 민속예술한마당 등 「통일문화축전」을 갖는 것으로
- 이 행사를 끝맺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통일대행진」행사에 남북의 각계각층과 해외동포들을 망라하여 한쪽에서 1,000명씩 모두 2,0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는 「통일문제 대토론회」에는 남북 쌍방에서 각기 50명씩의 정치인·학자·언론인 그리고 해외동포 대표들이 참가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남북 공동주최 「통일대행진」은 민간행사로 추진하되 쌍방 당국의 주선과 지원 그리고 보장하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 쌍방은 각기 「행사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오는 7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판문점에서 남북 각기 5명 내지 7명의 실 무대표들이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이번 제의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북한측의 제안들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서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누구보다 뼈아픈 고통과 불안속에 살아온 1천만 이산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민족대교류」선언에 따라 61,355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북한방문을 신청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금년 추석을 전후하여 이들 가운데 최소한 70세 이상의 이산가족들만이라도 자유왕래의 방법으로 고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측의 성의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통일대행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고 고령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길을 터서 민족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통일의 날을 앞당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발표 2주년 즈음 담화문

1991. 9. 11

오늘은 우리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간 세계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과거의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대 변혁을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상호 개방과 화해, 협력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냉전적 질서하에서 분단의 외적환경을 이루었던 미국과 중국, 소련, 일본 등 모든 나라들도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는 분단 45년이 경과하는 동안 처음으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남북간에 통일방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국제무대에서 화해·협력의 새로운 장을 펼쳐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거쳐야 할 공존공영의 질서를 구축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은 꿈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7천만 우리 민족은 반목과 대결의 관계를 지속해 온 지난날의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머지않아 통일국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결의와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바로 이러한 오늘의 시대적 흐름과 민족적 요구에 부응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입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민족자결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한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일로 가는 길에서 거쳐야 할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전쟁이나 폭력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 어느 일방의 우월한 힘에 의하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통일이 민족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이산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중지하는 것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세계가 화해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개방과 교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에 대해 비방증상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나 이산가족들의 왕래를 가로막는 비인도적인 자세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통일된 우리 조국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각자의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복지국가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 변화는 이같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명료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신뢰를 심고 하나의 민족국가로 변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남북한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그 중간단계로서 우리의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은 지난 날의 대립과 대결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남과 북이 함께 통일로 가는 길에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통일된 우리나라는 반드시 단일국가이어야 하며, 서로 다른 사상·이념·체제가 공존하는 것은 진정한 통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지금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민족사적 소명이자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각기 준비한 통일방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협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 당국간의 정상적인 대화를 외면한 채 몇몇 정당·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 같은 데서 민족의 생존과 장래가 걸린 문제를 논의·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진실된 자세가 아

님은 물론 남북간의 대립과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관계정상화를 이룩하고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며 교류협력을 성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로 돕고 도움을 주는 공영관계를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준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통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시한번 7천만 겨레의 슬기와 힘을 모아 금세기 안에는 기필코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세대에 맡겨진 민족사적 소명에 부응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한민족 만남과 화합의 밤 및 제10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격려사

1991, 9. 16

올해로서 벌써 열둘을 맞이하게 된 「이산가족의 날」에 즈음하여 조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써오신데 대해서 먼저 마음속으로부터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으로 두번째 열리게된 세계한민족체전에 참석하시기 위해 서울을 찾아주시고, 이 뜻깊은 기념식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해외동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만장하신 이산가족과 해외에서 오신 동포 여러분!

8.15 해방과 함께 불어닥친 뜻하지 않은 나라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한 집안의 부모형제가 본의 아니게 남과 북으로 흩어져 고향을 등지고 살게된지 어언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은 한맺힌 이산가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고향을 다시찾고, 잃었던 혈육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가로막거나 미루어 둘 수 없는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정부는 이산가족이 서로 다시 만나고 그리운 고향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인도적 차원의 과제로 여기고 그 해결을 서둘러 왔습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회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쌍방 적십자사간에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은 만 14년이 지난 1985년 9월 20일에 와서야 민족의 명절인 추석절을 기해 남북의 이산가족 50명으로 구성된 고향방문단이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하고, 헤어진 친척을 만나볼 수 있는 자그마한 결실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게 이루어진 이산가족의 만남은 그후 우리측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끝내 다시 이어지지 못한 채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지난 90년 7월에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해방 45주년을 맞는 8월 15일을 전후한 5일간을 「민족대교류기간」으로 선포하고, 남북의 동포들이 판문점을 통해 상대방 지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민족대교류”를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북한측의 반대로 결국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여기에 큰 기대를 걸었던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던 일을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올해에도 정부는 북한측에 광복 46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경축행사

등 “통일대행진”을 제의하면서 다가오는 추석을 기해 70세이상 노령 이산가족만이라도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북한 측은 이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밖에도 우리는 중단된 적십자회담을 다시 열어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수 차례 촉구하였습니다만, 북한측은 끝내 응해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측이 지금까지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이같은 고집스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닫혀있는 문을 열어놓고 남쪽 이산가족이나 외부 방문객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이 생이별한 혈육과 떠나온 고향을 몽매에도 그리는 1천만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벽을 허물고 동서가 화해와 협력, 개방과 개혁을 추구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인류가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보더라도 소련, 아프리카, 중국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까마득하게 멀게만 생각되던 나라에서부터 일본, 대만과 같은 이웃 나라에 이르기까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오신 우리 동포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2~3년전만 해도 감히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소련에서는 70년이 넘도록 그 나라를 지배해 온 공산당이 해체되고, 동구 사회주의 모든 나라도 민주화를 위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거센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북한만이 문을 굳게 잠근

채, 그들이 고집하는 것처럼 '우리식대로' 살아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7천만 우리 겨레가 다시 하나로 통일된 국가에서 남들처럼 오붓하고 당당하게 살아보겠다는 한결같은 뜻을 그렇게 오랫동안 거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속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미 그 성패가 판가름이 난 공산주의란 이념노선과 대결의식을 버리고, 2천 2백만 북한주민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와 인권, 복지를 보장하는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것을 꾸준하고 인내심 있게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내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역시 힘겹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은 물론,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온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만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금세기가 다가기 전에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가 통일된 민주선진조국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을 기필코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함께 모을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해 주신 국내외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이 밤이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유엔 동시가입 이후의 남북한관계

국제학술원 주최 유엔가입 경축강연회 연설 1991. 9. 18

만장하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학술원 이동원 이사장님!

오늘 우리사회 각계에서 활약하시는 지도급 인사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하신 가운데 『유엔동시가입후의 남북한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분단이후 남북한이 나란히 유엔 회원국이 된 오늘, 이와 관련된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펍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질서가 바뀌는 대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던 소련에서 공산당이 간판을 내린데 이어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에 있어 큰 전환이라 볼 수 있는 남북한 유엔가입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자연히 북한의 변화가능성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한관계의 장래

에 쓸리게 됩니다.

통일환경의 변화

지난 2~3년 동안 세계는 금세기를 마무리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세계를 규율하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동·서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제질서는 이제 이념보다 경제실리를 추구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유럽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1당독재체제가 잇달아 허물어지고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이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최근 소련에서 일어난 공산주의의 와해는 민주화와 개방을 향해 도도히 흐르는 역사적 조류를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것과 자유와 인권, 평등을 말살하려는 체제는 오래 지탱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세계 앞에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아시아공산국가 특히 소련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자리난 북한정권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대변혁의 물결이 한반도에도 밀려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그 시대적 배경이나 통일외교사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가입의 의의

돌이켜 보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우리 정부가 다섯 차례, 우리 우방들이 아홉 차례, 모두 열네 차례에 걸쳐 한국의 유엔가입 혹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공식적으로 제의되었

습니다.

북한 역시 1948년 9월 9일에 정권을 수립한 후 평양정권이 두 차례, 소련이 세 차례, 모두 다섯 차례나 북한의 유엔가입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한의 유엔가입문제를 놓고 남북한 당사자와 동·서 나라들이 40여년 동안 격렬한 경쟁·대결을 벌여온 것을 상기하면 이번 유엔가입은 참으로 감회가 깊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종래의 완강한 태도를 바꾸어 유엔에 가입한 것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고조되어 온 상황에서 이를 외면할 경우 초래될 국제적 고립을 모면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방들은 물론 특히 소련·중국이 보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지지태도가 북한의 입장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유엔가입이야말로 지난 88년 노태우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7.7선언』에 따라 우리가 북방정책을 끈질기게 추진하여 마침내 거두게 된 일대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가 아니라 두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한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이 통일로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할 과정이요, 한민족의 자존을 국제사회에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엔가입이 우리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남북 평화공존 단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은 이제 유엔헌장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틀과 규율위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책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북한이 유엔회원국이 되었다 해서 그들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당장 수정하든가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마는 이러한 그들 노선이 어느정도 견제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것은 냉전체제의 붕괴를 바탕으로 유엔의 역할과 기능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모험주의적 대남전략에 대한 유엔의 견제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유엔가입을 계기로 국제기구, 서방국가들과 접근을 피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북한의 폐쇄체제는 점차 개방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남북한 관계개선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비록 남북대결관계의 종식으로 바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점차 한반도에서 상호실체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분단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와 유엔과의 관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1기는 1948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로, 한반도문제를 유엔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던 시대였고, 제 2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로 한반도문제를 유엔 밖에서 해결하여 보려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 3기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민족의 노력과 유엔의 협조가 조화를 이루어 나갈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화해와 협조의 국제적 조류에 순응하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상호신뢰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분단이 타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통일은 국제사회

의 축복속에 우리 겨레 스스로의 의사와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통일의 내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한의 상황, 특히 북한의 상황과 남북한 관계는 어떠한가?

북한의 상황

지난 2~3년 동안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북한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첫째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화 현상이 심화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동구의 개방·개혁으로 공산주의 운동은 쇠퇴·붕괴되고 있고 이것은 40여년 동안 공산주의 팽창을 체제유지의 배경으로 삼아 왔던 북한에게 일대 타격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북한은 나머지 공산국가 가운데 중국·월남·쿠바 등과 이념적 결속을 다지는 정도로 외교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좌경 비동맹권과의 관계도 세태를 반영하듯 쇠퇴일로 를 걷고 있습니다.

둘째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파탄직전의 상황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경제를 개관해 보면 지난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78년부터 시작된 2차 7개년계획 기간중에는 4.5%로 둔화되었고, 87년부터 시작된 3차 7개년계획 기간에 들어와서는 3% 이하로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은 과중한 군사비 부담, 89년 평양청소년대회에 50억달러 투입, 에너지부족, 식량부족, 무역감

소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식량과 에너지부족현상입니다. 식량의 경우 작년도 생산량 가운데 12% 감소로 연간 100만톤 이상이 부족한 형편이며, 에너지의 경우는 석탄생산·원유도입 감소로 인해 전체 산업시설가동율이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련·중국이 경화결제를 요구함에 따른 교역감소 현상은 북한경제를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의욕이 저하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북한주민들은 겉으로는 『아버이 수령의 은덕으로 부러움 없이 살고 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 아래 당과 주석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주민의식은 북한사회가 조금씩 개방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변화와 동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북한을 방문하였던 인사나 월남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가중되는 노력동원속에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생활조건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고,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갈망하면서 실용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북한지도부는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와 보존에 최대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당국자들은 남북관계가 『먹고 먹히우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독일식과 같은 흡수통일이나 제도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통일을 본 북한당국자들이 북한이 제 2의 동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스스로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북한에 의해 흡수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국가목표의 최우선순위를 체제유지에 둔 북한지도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주민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그동안 소련·동구 공산국가들의 변화요인을, 첫째 제국주의자들의 음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둘째 당의 영도력 부족과 인민들의 사상무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며, 셋째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네 북한의 경우는 훌륭한 『주체사상』과 태양과 같은 지도자가 있고 당과 인민이 단결돼 있기 때문에 소련·동구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8월 31일 최근 소련사태와 관련, 북한당국의 심정과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 세워보려고 반사회주의적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사회주의 종말에 대해서 요란스럽게 광고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에게서 위대한 수령, 강력한 당, 그리고 충직한 인민이 있어 통일단결을 이룩했으므로 서풍이나 북풍이 불어와도 끄떡없고,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소련사태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필승불패』의 논리와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앞세워 주민통제와 결속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강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지도부는 체제유지를 위한 방책의 하나로 대외정책에서 유연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가입을 비롯해 일본과의 수교교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은 그들이 국제적 고립상황을 타개하는 동시에 서방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획득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외정책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정책상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통일문제에 관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고려연방제』방안에 의해 통일이 되어야 하며 『먹고 먹히는 통일은 안된다』고 말함으로써 동·서독 통일방식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자기들이 한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게 된 것은 2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조선』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누차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의 조선』 정책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남조선혁명』 논리와 동의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해 오면서도 우리 정부를 『괴뢰』나 『반통일세력』이니 하고 매도하면서 소위 『민간급대화』라는 명분하에 재야·운동권 단체와 접촉을 시도하고 반정부투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남적화전전략이 기본적으로 변치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컨대 체제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의 북한지도부는 총체적 난국 타개책으로 대외적으로는 현실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대내·대남관계에서는 『하나의 조선』논리에 입각한 혁명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정책혼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내외정세의 변화에 대비해서 정부는 통일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방향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통일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하고 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실천에 옮겨나갈 수 있는 면밀한 전략·전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통일이어야 하는가? 라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문제와 어떻게 통일에 접근할 것인가? 라는 통일과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통일전략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통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서 우리 앞에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우리 민족이 이룩하고자 하는 통일조국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줄 압니다.

그것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밝혔듯이 7천만 동포와 후손들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단일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나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려는 목적이 통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 우리민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의 폭을 넓

히려는 데 있다고 할 때,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반드시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소련·동구의 변혁과 동·서독 통일에서 보듯이 공산주의체제로는 자유·평등·번영을 약속하는 통일국가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의 실험이 끝난 이 마당에 북한당국도 진정으로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위한다면 민주화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남북한사회 모두가 민주화, 복지화의 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민족이 것처럼 바라는 통일된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이념과 제도의 차가 영속하는 연방형태가 아닌 단일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유지해온 우리 겨레의 간절한 여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평화공존을 통해 통일로 접근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반도 분단은 단순한 국토분단이 아닌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 대결의 양상을 지니고 있고, 반세기 가까이 진행되어온 민족이질화 현상마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된 불신과 대결, 그리고 극심한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 남북한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북한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공존공영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공존을 통한 통일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하여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바로 그 기본틀을 마련하는 임무가 남북고위급회담, 정상회담 등 책임있는 쌍방 당국에 부여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틀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개선에 관한 기본합의서』안을 북한측에 제시하고 합의를 촉구하여 왔습니다.

쌍방간에 채택해야 할 기본틀 내용에는 통일시까지 상호체제존중,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비방·중상 중지 등 원칙에 관한 것과 불가침에 관한 사항, 이산가족 왕래, 통행·통신·통상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주연락대표부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가침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보장될 수 있고 실천이 뒤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7.4 남북공동성명』은 사실상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북한측의 크고 작은 무력도발과 폭력, 테러 등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미루어 앞으로 남북한간에 채택할 불가침선언은 불가침에 관한 원칙과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보장장치 등 실천조치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쌍방이 이와같은 기본틀을 토대로 남북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하여 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경우, 한반도

평화공존체제는 보다 안정되고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당면문제와 장래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북한측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있어 유일한 수단이 남북대화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쌍방은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지난 8월 27일,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소련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지난 8월 20일 남한지역의 콜레라 발생이라는 궁색한 이유를 내세워 남북고위급회담을 평양에서 열 수 없다고 하면서 판문점에서 회담을 갖자고 하여 오다가, 마침내는 오는 10월로 회담을 연기하자고 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북한이 소련사태를 속단하여 남북관계에 임하는 그들의 입장을 조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북한이 이제까지 소리높여 왔던 자주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실망스러운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실무대표접촉을 가졌습시다만, 북한은 실무대표접촉에서도 불가침선언부터 채택하여야 한다는 기존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불가침과 교류·협력을 어떻게 실천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내용의 토의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모든 대화를 인내심을 갖고 성실히 추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전향적으로 임하되 원칙을 잃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고 의연한 자

세를 갖고 착실히 문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남북한관계 전망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관계의 현상에 기초하여 앞으로 남북한관계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내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인 우리민족의 의사와 역량에 의해 해결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라는 국제형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주변환경·여건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통일환경은 명백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더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도 여러가지 어려움속에 꾸준히 추진되어 착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평화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체제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북한체제의 변화양상이 곧 남북한관계의 변화를 기능하는 중요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변화유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변화유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북한의 내외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변화가 가능한가를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국가들은 그 혁명전통과 개혁전통, 경제발전 정도, 서방세계와의 관계, 사회적 다원화 정도 등의 변수에 따라 여러가지 변화의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중국과 같이 『위로부터의 제한적 개방·개혁』방식이 있는가 하면, 소련과 같이 『위로부터의 급진적 개방·개혁』방식을 일반국민이 떠 받드는 경우가 있고, 루마니아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따라 체제가 급속하게 붕괴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동독과 같이 소련의 개혁압력과 내부의 욕구로 인해 체제가 붕괴되고 흡수통일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들 사회주의국가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역사적·정치문화적·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독특한 성격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유일적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수령론』에 입각하여 수령·당·대중이 삼위일체가 되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당-국가체제를 갖추고 있고 자급자족의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혁명적 대가정』과 같은 병영사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 식대로의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정권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이용하여 냉전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군사적 지배체제를 확립해 왔습니다.

남북한간에 긴장조성과 대결자세를 기초로 정권을 유지하는 분단 관리체제를 운영해온 것입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요소들은 북한체제 유지·강화에 강점이 되어 온 반면, 체제의 개방·개혁에는 장애물이 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같은 변화저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국제환경의 변화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독재적이고 폐쇄적인 체제를 고수하려 한다 하더라도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으며, 결국 외부적 개방·개혁 압력은 내부적 개방·개혁 욕구를 촉발,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은 장기적 경제침체와 경제위기 문제입니다.

그들이 파탄직전에 높여있는 경제를 구하고 점증하는 인민생활개선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개방·개혁을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변화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북한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 갈 것인가?

북한사회 내부에 불평·불만 요인과 실용주의적 사고가 싹트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체제의 특징으로 미루어 현재의 조건에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지도부가 출현하거나, 아래로부터 변화를 요구하는 변혁운동이 단기일내에 조직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위로부터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위로부터 부분적이고 점진적 변화를 시도할 경우, 그것은 정치적 분야에서 공산당 독재라는 권위주의 체제는 지속시키되 경제적 분야에서는 비교적 개방·개혁을 시도하는 일종의 개발독재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공조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유엔가입과 함께 대일수교와 대미접근에 박차를 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회복에 신경을 쓰겠지만 기정사실화 되다시피한 두 나라간의 소원관계와 소련내부사정 등은 대북경제지원의 격감현상을 가져 올 것이므로, 북한으로서는 그 공백을 일본으로부터 메꾸려는 입장에서 수교협상과 경제협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걸프전쟁과 소련사태를 통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한편, 유엔가입을 이용하여 국제무대에서 미군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 군축문제 등을 앞세운 평화공세를 가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남관계와 통일정책면에서는 기본적인 목표와 의지는 변경하지 않고 전술적인 유연성을 발휘하여 남북고위급회담 등에 호응하는 한편, 그들 내부단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교역 확대나 다자간 경제협력 방식을 통한 실질적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응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남북대화는 북한의 대미·일 수교에 연계되어 있고 중·소 또한 바라고 있는 문제인 만큼 북한이 형식적으로나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본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당장 생산적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앞으로도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주장 등을 앞세워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기존태도를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정책혼조 현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남북한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보이고 있는 현실주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들 내부적으로 또는 대남관계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시책이 나타나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혁명주의노선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아울러 남북한 유엔가입을 계기로 한·중수교와 북한·일본 수교가 촉진되고 북한·미국관계가 개선될 경우, 이것 역시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체제를 수용치 않을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북평화공존체제를 자기들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의도야 어떻든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유엔동시가입, 북한의 제한적 개방, 평화공존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평화통일의 기틀을 다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상황전개 과정에서, 만약 예상외의 돌출적 사건이 북한내부에서 발생한다면 북한체제의 변화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며 남북한관계나 통일문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향후 몇 년간은 민족분단사에 분수령을 이루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북한은 변해야 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로 귀결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주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세와 역량의 비축이 더 간절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

고 하겠습니다.

민주적 정치발전과 지속적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정의의 구현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통일의 튼튼한 기반을 다져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협조를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수난으로 얼룩진 금세기가 가기전에 우리 겨레의 오랜 숙원인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영광된 통일조국을 이룩하여 후손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Change of Soviet Military Policy and the Two Koreas: Nuclear Issues and Arms Control

Keynote Address at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enter for American and Soviet Studies of Dankook University November 4, 1991

Director Kim Yu-nam, Ambassador Oleg Sokolov, Admiral James Winnefeld, General Viktor Novozhilov, Esteemed Scholars, Ladies and Gentlemen;

I am very pleased to attend this prestigious forum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ed by the Center for American and Soviet studies of Dankook University under the meaningful theme of 'The Change of Soviet Military Policy and the Two Koreas'. I also congratulate Director Kim and the Center for having assembled here such renowned scholars, specialists, high-ranking military officers.

As we all aware, the global community has been going through a great transformation of historical significance.

The outmoded framework of the cold war order of nearly a half century after World War II marked by confrontation between the east and west gave way to a new world order based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fundamental changes taking place in the past few years are most welcome phenomena for us, for they eloquently indicate that the global community of mankind is heading toward a better and more prosperous world in which peace and prosperity reign supreme.

This transformation of the world situation is what all you intelligent and learned participants to discuss and exchange constructive ideas during the current session of the conference.

Among other significant developments which have taken place in the recent past, we Koreans view the occasion of the German reunification materialized in October last year as the most amazing and interesting phenomenon with an understandable reason. We instinctively link the successful case of the German unification with our predic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for we found a similar situ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Even as we, both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applaud and envy the achievement of the German people we recognize the daunting difficulty and difference of the situation surrounding our part of the world. Much as we are hopeful and desirous of an early and peaceful

achievement of a national merger with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much as we see the host of obstacles and pessimism ahead of us.

In such backdrop, we placed much hope on the outcome of the Fourth Round of the Prime Ministerial Talks held in Pyongyang October 23–24. As we aware, the talks produced a consensus on the title and contents of an agreement, the contents of which have to be ironed out at Panmunjom at working level meetings for more formal discussions at the forthcoming Fifth Round of the Prime Ministerial meeting to be held in Seoul in coming December. Much can be said of the devoidness of the said agreement which lacked concrete details, we are still hopeful of further development in the forthcoming days and meetings because we on our part would like to interpret the Fourth Round meeting as a moderate success in the our northern counterpart is coming to their proper sense at last grasping the futility of clinging to the isolationist stance in the changing world environment and sticking to its stance of going along with their own Juche way.

The epochal transformation of the world, in which the traditional two superpower equilibrium and rivalry yielded to a new world order of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joint efforts, has ushered in complete changes in international order. We noticed the decisive decline of ideo-

logical rigidity, dictatorial egotism of stronger powers in many parts of the world, and unravelling of nation states that were bound together by the rule of jungle in the past. We do aspire for the emergence of a global system that is based on an equitable cooperation and justice in place of a world dominated by the balance of power, or balance of terror.

Let me now turn to the problems confronting us in this part of the world. The Korean peninsula is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so situated to become the epicenter of a global and regional power play among the great powers, namely, the United States, Russia, China and Japan. They all coveted and vied for Korea at one time or another to further their national interests.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at the turn of century and the Korean War of the 1950s well illustrate such reality.

With such an unfortunate historical background behind us, we take pleasure seeing nowadays the epochal transformation in the super-power relations, particularly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which in turn focuses attention to the fluid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n general and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In a radical departure from the stance of confrontation of yesteryears the two superpowers now seek mutual accommodation in the region as well as in Korea.

Korea's long-overdue entry into the United Nations was realized on September this year. The Rep. of Korea and the DPRK simultaneously became members of the UN after 42 long years since they first applied memberships in 1949.

By becoming members of the world body, South and North Korea have taken a giant step forward in paving a new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which hopefully leading to an eventual national unification. Mutual trust and confidence that could be built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will certainly move the two Koreas toward a more durabl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Nations, I am sure, will provide excellent opportunities for the two Koreas to make a significant stride in these very challenging endeavours.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the Republic of Korea unequivocally accepts and supports the competence and oblig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pledge to honour the provisions of all the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we have committed ourselves to, including those agreements relating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Our intention to subscribe to the purpose and activity of the IAEA commensurat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has been very firm and well recognized as such as attested by the fact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elected to the Executive Board of

the IAEA last month.

In this context my government welcomed and enthusiastically supported the recent initiatives taken by President Bush and the positive response pronounced by President Gorbachev on drastic reduction and withdrawal of nuclear arsenal from many parts of the world, eliminating the threat of nuclear confrontations among the rivalling powers. To insure safeguarding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it is needed that all relevant parties should pledge themselves not to engage in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to threaten neighboring states as responsibl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of the IAEA. We in this context have earnestly been urging North Korea to abide by the Non-proliferation Treaty by voluntarily accepting the international inspections by the IAEA on its nuclear facilities. If indeed it does not possess or intend to develop and possess nuclear capabilities to produce nuclear arsenals it should have no qualms in accepting such international inspections.

While we urge North Korea to be more forthcoming in accepting international nuclear obligations, we would ask the world community to exert their utmost to persuade North Korea to heed worldwide aspiration for peace and cooperation.

Distinguished scholars and gues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e Koreans pay high tribute to the leadership of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Gorbachev and their initiatives aimed at ushering in a better and safer world to live. We applaud their cooperative stance in arms reduction and control, particularly of the highly threatening nuclear arsenals which closely concern Korea in its survival and prosperity as a viable nation.

As well all know, President Roh Tae Woo keeps close contacts and rapports with the two presidents. We still fondly recall that the two leaders of the superpowers had helped us through their separate meetings with President Roh in realizing such positive outcomes as the thawing of tense atmosphere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the entry into the United Nations of two Korea, paving a most favourable setting and environment for dialogues between the two parts of Korea.

The two great countries that you participants represent today, not as the mortal antagonists but as close partners in the promotion of world peace and prosperity, hold the day to the survival and peace and prosperity of the mankind under a newly developing global order. The two powers are indeed still the lynchpins that keep the world from catastrophe and devastation and move the global

community toward peace and prosperity.

Unlike the détente of the early 1970s which lasted only a brief period the present cooperative relations of the two superpowers are perceived to be real, hastening a fundamental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world.

The current détente also involves the entire span of the world community. If President Gorbachev deserved for a credit for his epochal initiatives opening up a new er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ducing world tension, then President Bush may be commended for his bold initiatives in responding and positively pursuing more drastic measures to ensure world peace and stability that aimed at a global reorientation of priority and structure. Mentioning this, I sincerely wish that their enlightened endeavours would lead us in a most cooperative world of peace and prosperity, and at the same time, usher the two parts of Korea to a lasting peace and unification.

The contemporary American-Soviet relations, coupled with their more active involvements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the victorious settlement of the Gulf war and the ensuing peace initiatives being culminated in the convening of a Middle East conference in Madrid to seek a permanent reconciliation among the Arabs and Israelis, pose a greater challenge on them as the superpowers are capable enough to lead the world transformation in a more constructive direction.

As a traditional ally of Korea, the United States will fine itself still deeply involved with the Korean issues not as the onesided donor of material and physical sense but as an equal partner of Korea in providing moral and political assistance in securing an optimum environment and setting for a meaningful negotiation between the two parts of Korea aimed at peaceful coexistence and eventua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steemed friends

It was back in 1835, more than 15 decades ago that a French political philosopher Alex de Tocqueville wisely noted the potency of both America and Russia and their strong roles in the forthcoming ages. In his first volume of 'Democracy in America' he prophesized the advent of the United States as a great power. Among the factors Tocqueville cited were America's immense territorial size, abundant natural resources, vibrant national characters and a growing population. He also predicted another nation, Russia, to be the forthcoming great nation destined to be a great power for almost the same grounds cited for the United States.

The history has been kind to Tocqueville in proving the validity of his predictions. The present century of ours eloquently proved the truth of the prophecy by bestowing the two countries the dominant superpower roles

in this century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shaping and reshaping the world order.

The present troubled Soviet Union in the midst of uni-on-wide transformation may or may not prove the validity of the great scholar in the forthcoming century. Yet, we are inclined to view the present remolding of the Soviet Union promises a brighter future. By democratizing and decentraliz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s hitherto emanated solely from the center and ensuring an equitable utilization of the abundant natural resources as well as of human resources, the Soviet Union will start to play a new role as a leading nation of the world.

While the rapid changes in Eastern Europe overshadowed situations elsewhere the political and economic scenes in Northeast Asia moved perceptivel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long last started its own reinstructing of the socialist economy by opening its economy to outside world and encouraging private initiatives, however restrictive they may be at present.

Such external transformation especially on the part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deprived North Korea of material and moral supports it once took for granted. They not only drastically reduced the amount of military and economic assistances but also rid North Korea of polit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that helped sustain the Kim IL

Sung regime.

The two great power neighbours of North Korea were also known to have been pressuring the regime to adapt to outside world by opening the country for economic opportunity in order to sustain viable national economy in face of ever lessening economic aids from the socialist neighbours.

This in turn obliged the North to turn to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or economic and financial aids while ignoring the overture of South Korea for enhanced dialogue and multi-faceted interchanges.

Given this world-wide transformation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factors reshaping the global, regional and country situations, I am hopeful that this learned conference consider among others the following issues to enlighten people who are concerned with the current development in each and every area of contention:

1. As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ing developed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how they would affect the south and north of Korea?
2. Would the fact of the two Koreas becoming separat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nduce changes on the positions of them, collectively and separately?
3. As the post-cold war international order emerges in Europe, where does Northeast Asia fit in the global politics and security framework of cooperation?

Ladies and gentlemen.

There is an often quoted proverb which say that “when the giant whales fight, the shrimps get crushed” Well, fortunately, the whales or the superpowers are in the process of seeking a more productive way of mutual accommod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shrimps, the two Koreas, are now rest assured that they are almost out of harms way and can mind their own family business among themselves.

In a new environment of peaceful coexistence, the whales and the shrimps can pursue constructive and cooperative interchanges among themselves, and in the shrimp community shrimps are free to enter a profitable negotiation for a new order for permanent peace and stability on their peninsula.

Regrettably though, one the shrimps, North Korea still defies the heaven-sent opportunit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for the collective benefit of the 70million people of Korea and instead insists on its self-imposed isolation sticking to the Juche idelolgy. But North Korea will hopefully come to their correct sense sooner or later and accept our overture of mutual accomodation and prosperity. It simply is not possible to stand alone for and extended period of time resisting the overwhelming tide of worldwide transformation heading toward a cooperative and prosperous world of human kind.

Our goal is simple and clear, that is, to induce North Korea to swim with us along the world-wide tide of reform and openness, not against it. I earnestly hope that this conference produce a tangible result that will be a valuable addition of our concreted efforts for this goal.

Thank you.

Korean Unification in a New World Order

Keynote Address at the 4th KIDA—CSIS Workshop November 7, 1991

President Song Sun Yong, the esteemed scholars of Korea and abroad, and ladies and gentlemen ;

I am very pleased to attend this distinguished forum to discuss the matters related to the evolving new international order and the reunification of Korea. My warm welcome and deep appreciation are extended to those guest scholars of foreign countries.

1. The Background Setting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 International Order

On the outset, I would like to compare the present decade of the twentieth century with the last decade of the previous century, the 19th.

The past century was particularly relevant to Korea because of the fact that during this period we witnessed a rapid and radical trans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such national upheavals as the forced annexation of the nation by the imperial Japan, liberation in 1945 followed by the tragedy of national division, and the outbreak of Korean War.

The last decade of the 19th century, cynically called as *fin de siècle*, was darkly marked by many events in which the great powers competed each other expanding their territories through conquest of weaker nations of the world.

The political system of that time was beholden to a concept of the supremacy of nation-state and expansion of national interests.

Under such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great powers of the world waged an endless conflict and confrontations among themselves which in turn drove the world into the catastrophe of global wars in 1914 and in 1939. As a result, the world after world war II shaped itself into a bipolar political system.

The bipolar world order was almost completely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hich competed and confronted each other to the brinks of war for political, economic and ideological domination of the

world. The two superpowers pursued an endless arms development aimed at gaining superiority over the other, while continuously expanding their frontiers of influence throughout the world; implementing such aggressive policies as forward deployment of military forces and containment of others through political, economical as well as military means. It was most notable of all that most of these events were conducted with the background settings of nuclear arsenals as means of threat as well as threat of reprisal.

Such superpower rivalry in the world was culminated in a 'balance of terror' which actually deterred each other from a use of a first strike capability out of a fear of massive counter-strike for which neither power possessed an effective defense mechanism. After the almost half century of stand-off situation, it was the Soviet Union which brinked first being overwhelmed by the economic collapse stemming from the excessive outlays of national resources in the arms expansions while neglecting social welfare of its people.

The newly emerged Soviet leadership under dire national emergency of disintegration of the Union and the collapse of economy saw the imperatives of accommodating the West as new partners in solving their economy and advancing their technology in marked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concept of viewing the West as an implac-

able enemy. They also started to realize that their worst enemy is rather the rigid ideological structure of economy as well as the unproductivity of the centralized system.

It is fortunate that the Soviet leadership finally came to their sense realizing that they must abandon the confrontational international policy and reorganize the dictatorial and centralized Soviet system, and work for a new world order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West.

Thus, we witness today the ongoing national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for an innovation and accommodation in a largely peaceful environment, the failed coup attempt of last August notwithstanding.

At the early stage of world transformation the two leaders of the US and the Soviet Union met in December of 1989 at the island of Malta and declared the end of the cold war regime saying the world has entered into a new era of cooperation from the cold war era of mutual distrust between the East and West. Unlike the situation in *fin de siècle*, which signified the horror and gloomy situation of the end of the last century, a hopeful new decade is now opening to prepare for the coming century. Through the disintegration of the cold war structure there emerges a new community based on freedom and human rights.

As the cold war regime is being dissolved and a new

era of reconciliation and development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is unfolding, there appear today two prominent characters of new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s.

The first is the emergence of a new international political behavior which moves the self-centered thinking of a nation-state to a broader regional cooperative behavior. The second is the surfacing of economic issues as the primal international concerns replacing those of political issues. These two issues are interrelated between themselves.

The system of nation-state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five centuries since the Renaissance began unravelling in Europe, and the current trend is to move toward the regional and supra-national integration.

A free trading block is being formed in North America comprising the U. S., Canada, and Mexico, and the Asia-Pacific region is groping for a possible regional cooperative structures as evinced by the APEC.

As the great power structures with background settings of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e being regarded as wasteful and the danger that each and every nation can become the target of such weapon system is generally felt, many nations started seeking an alternative in the form of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Thus, the traditional political behavior which relied upon a self-supporting military and economic policies are

being regarded as outmoded.

As the risks of large-scale war are being lessened as a result of the dissolution of the cold-war regime, the concerns of nations of the world are concentrated to ensuring peoples welfare.

Today no government can maintain the legitimacy without resolving the problems of livelihood and welfare of its people.

The issue of economy was mainly responsible for the disintegration of the cold-war regime and, as a consequence of it, economic issue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e human nature which seeks happiness is seen to be the cause of a human paradigm to overcome ideology and the fear of war.

In order for todays world to depart from the past practices of isolation and confrontation and open a new ag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t is imperative that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share their respective knowledge, information and resources for the benefit of all mankind.

At this age of advanced civilization where technology and science develop day by day, the global community must pursue brighter future through closer interchanges and cooperation.

2. A Search for Korean Reunification : Endeavors on the Part of Korean People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undergoing an epochal transformation, Korean peoples' concerns are being concentrated to the issues of unification of their land.

While we reflect upon the unhappy past when the Korean people could not properly adapt to the trend of history, we are now saddened to notice the reality of national division which greatly constrains people's freedom and welfare.

Even as the world is progressing toward supra-national groupings the realities of Korea which has yet to achieve national unification exert us Koreans to move toward a unification as soon as possible.

When the global society is moving toward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departing from the confrontation and animosity of yesteryears, we Koreans, who could not overcome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the fear of war, must resolutely strive to adapting itself to the new reality of the ideas of civilized society.

The unification of Korea not only means a restoration of national society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the nation but also holds great significance as the promotion of the human welfare and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end of today.

Therefore, the efforts for Korea's national unification must be pursued by endeavours of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along wit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Sixth Republic we have initiated substantial efforts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rough lessening of tensions and promotion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Roh Tae Woo pronounced on July 7, 1988 the new government policy of fostering a national community to be pursued through dismantling the walls of distrust and opening new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arts of Korea.

The Seoul Olympic Games of 1988 which was held successfully as an off-shoot of what we call 'Northern Policy' has done a great part in our foreign policy to rescind the cold war ages and usher in a new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ound the world.

On September 17 this year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separately joined the United Nations. This signified that even on the Korean peninsula a new age of reconciliation, openness and cooperation, which had been unfolding other part of the world, can be unfolded.

As the cold war regime which had been the cause and perpetuating factor of Korean national division is rapidly becoming the legacy of the past, there exists no outside

obstacle for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izing on such opportune international trend, the two Koreas should restore and build mutual confidence and peace-oriented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develop a community frameworks by widening the scope of interchanges and cooperation.

Ever since the national division in 1945, North Korea has perpetuated the political distrus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rough its strategies of confrontation and subversion against South Korea.

To accept the reality of the existence of the two ent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very starting point leading to a peaceful unification, not as an act of perpetual division of the land as the North Korean regime insists.

With this backdrop in mind, it is significant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agreed to hold South-North High Level talks by accepting our proposal to solve various pending issues through dialogue between the responsible authorities.

At the fourth round of the High Level meeting which was held on October 22~24 two delegates agreed to adopt an agreement, to be called, "South-North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agreement contains five chapters, namely, (1) pre-

amble, (2) the reconciliation, (3) non-aggression, (4) exchanges and cooperations (5) validity of agreement. Even devoid of concrete details, we see it as a significant progress in that we could agree on basic frames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e South-North relation.

At the fifth round of the Prime Ministers talks to be held in Seoul on December 10~13, we would like to reach an agreement on such issues as reconciliation and non-aggression as well as interchanges and cooperation as practical matters of a fundamental importance. We will also seek the establishment of working committe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greed matters.

At the meeting we shall seek mutual accommodation through consensus and compromise while sticking to fundamental principles. We are prepared to be flexible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delegates.

By producing and implementing an agreement on reconciliation and non-aggression as well as interchanges and cooperation, we will be able to build fundamental bases to lead us to national unification, while liquidating the legacy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parts of Korea.

On such solid bases South and North Korea can construct a peace structure, reduce and control armaments on the basis of mutual military confidence, and implement free flows of people, materials and information between them.

Our objectives will not be accomplished merely by liquidating the history of confrontation. It is more important to pursue various matters of next stages leading to unification.

In order to resolve such matters for unification we must negotiate and compromise on the concrete proposals of each side, and prepare a joint national charter for the unification, so as to agree on a transitory system pending unification. In other words, we shall be tackling pending issues one by one before reaching final destination of the unification.

There are a host of difficult issues lying ahead of us. One of those major issues is the problem of nuclear development to produce a nuclear arsenal in North Korea.

Although North Korea repeatedly insists that it has no will or capability to develop nuclear weapons, they adamantly refuse to sign a nuclear safeguard agreement with the IAEA and defy international inspection of its nuclear sites, thereby provoking international tensions and anxiety.

North Korea's defiance of world opinion which favours denuclearization and enhanced cooperation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poses a huge obstacle to the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and threatens the stability of the Northeast Asia.

North Korea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must renounce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soon as possible and unconditionally accept international inspections on its nuclear facilities

In this respect all the relevant part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China and Japan, should positively cooperat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deterring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3. The Endeavours for the Korean Unific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issues pending between the two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resolved primarily through the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But in the light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n national division and the geopolitical pos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require the cooperation of neighbouring countries as a realistic consideration.

Such logic is deemed reasonable when we take into consideration of such phenomena as the disintegration of the cold war regime, the acceleration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the world community, and the welcoming facts of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on Cambodian reconciliation on October 23, and the convening of peace conference in Madrid among the Arabs and Israelis under

the aegis of two superpowers.

Despite the general trend of world politics which clearly moves toward a wider regionalization departing from traditional nation-state politics, the reality of Northeast Asia is seen many steps behind the historical trend of the world.

In this connecting, the question of how to broaden the scope of inter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the nations of the region is a common theme that must be solved among Koreans and concerned parti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forthcoming days.

We can play a leading role along with other Northeast Asian countries for the promotion of wider regional cooperation so as to ensure regional stability, peace and prosperity. We also expect such frameworks for regional cooperation would contribute in facilitating the opening of North Korea and accelerating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North Korea should have no fears about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world. It rather should recognize the positive messages such trend would indicate, and behave accordingly.

While the regional cooperation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enhanced, Korea will maintain close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U. S. and other traditional allies.

We should especially be cognizant of the roles the U. S. has play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keeping relative balan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U. S. on its part must continue to play the traditional roles as the sole surviving superpower in the world commensurate with its geopolitical position and historical legacy.

Without ensuring a pea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neither world peace nor unification of Korea can be expected. Accordingly, we must strive hard to prevent tragic situations caused by power plays and arms expansion among the nations that may result from a power vacuum in the region.

In order to mainta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abil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or the sake of world peace, Korea and the U. S. should continue their cooperative endeavours.

In this respect, Japan too should continuously play the role of the good neighbor of Korea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furthermore expect Japan to play a positive role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In this regard, Japan should recognize that its ongoing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for the establishment of formal relations has an important bearing o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ccordingly, must proceed so prudently as to contribute to the smooth development of the South-North relations, and enhance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As we understand it, Japan has made it clear that a renunciation of nuclear arms development is an absolute prerequisite on the part of North Korea in normalizing its relations with Japan. We regard such attitude of Japan as most desirable.

We expect Japan,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ake sincere efforts to induce North Korea toward reform and openness.

4. The Prospect of Korean Unification and the Expected Roles of a United Korea in the New World Order.

Despite the ongoing epochal transformation in the global scenes,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n area where the old habits of confrontation and mistrust prevail. This regrettable situation persists because of an adamant North Korean stance sticking to isolationistic and outdated policies.

But within the world environment of freedom an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for the collective benefits of humankind the North Korean stance of “we go along with our own ways” will only further isolate them to the extent of endangering the very survival of the regime.

Accordingly, North Korea cannot possibly pursue the present isolationistic policy much longer, and signs of such changes are not hard to detect. Before long we expect the two Koreas jointly work for the restoration and development of national community relations through expanding interchanges and cooperation within the background of worldwid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light of the ongoing trend of the world community and strong aspiration of the Korean people we can foresee the acceleration of the process for unification once the structure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liquidated, hopefully before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united Korea of our expectation shall guarantee all people of the South and the North freedom, human rights as well as happiness in a framework of democratic-welfare nation. That Korea shall maintain cooperative and friendly relations with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will positively contribute to world peace and human welfare.

However, the Northeast Asian region where we live contains a number of variables that undermin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stable regional cooperative body.

In the Northeast Asia, conflicting national interests of the four powers, the United States, USSR, China, and Japan, converge without remission. In some countries of

the region the first-generation revolutionaries still hold the helms of the governments and hinder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and liberalization. The unstable situation in the Soviet Union and territorial disputes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pose formidable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ooperation.

Also, the lack of cultural homogeneity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and the differenc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want of a gravitating core force or system cause a delay in the formation of regional cooperative system.

Under such regional environment, the Republic of Korea which endured the hardship of the past century, including colonial rules, repeated wars, poverties,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s, can now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welfare of th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Korea is also in position to contribute to the regional stability availing its geographical position where national interests of the four great powers converge.

Korea can play a leading role i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taking advantage of the peace-loving nature of the people and a record of non-aggressive history.

The Korean unification under an environment of the new global order will contribute much to th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nd will give an impetus to facilitating the cooperative new era which is now unfolding in a global circumstance of peace and prosperity.

I repeat that the united Korea will voluntarily join in and play a role within a global framework of cooperation.

I earnestly wish you will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reunification in the regional and global context. I do expect your cooperation to our aspiration and efforts for Korea's national unification.

Thank you

통정 91-11-56

1991년 통일정책관련 주요연설문

인 쇄 : 1991년 12월 23일

발 행 : 1991년 12월 30일

발행처 : 통일원 통일정책실

(제 3 정책관실)

인쇄소 : 웃 고 문 화 사
